▶▶ 매일 INDEX

7면
익산 미륵사 중문, 디지털 실감콘텐츠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음 4월 13일) 제350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생, 도정 시작과 끝'

전북특별자치도, '다 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본격 추진
위기극복 586억 등 총 774억원, 도의회 임시회서 원안 통과돼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민생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23일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2%(5,233억원) 증가한 10조5,141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의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가 편성,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위기 아동·장애인·신 취약청년 지원 등 '고충 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전세 피해자 보호·예방,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정의 시작과 끝은 민생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살리기에 중점에 두고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 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행정과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 함께 민생추진단'을 지속해서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 민생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추모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 행사 개최

"숭고한 오월 정신 이어받겠습니다"

故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해로 의미 커
김관영 도지사 "민주주의·정의의 가치 발전시킬 것"
서거석 교육감 "의로운 전통 계승되도록 노력" 다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 200여명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 영령을 기리고 숭고한 오월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에 참석해 민주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추모식 외에도, 문화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진행됐으며, 모두가 하나되어 민주화를 향한 숭고한 뜻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에 의한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 고(故) 이세종 열사임을 공식 인정한 해로 그 의미가 크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는 전북대 고(故)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임이 인정된 의미있는 해"라며, "전북이 민주화운동 한가운데 자리했음을 44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세종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로운 분노,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우리 전북인들의 꺾이지 않는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었다."며 "전북자치도 교육감으로서 우리 지역의 의로운 전통이 후세들에게 바르게 계승되도록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전북자치도내에서는 기념식 및 추모식 외에도 학술제, 민주묘지 참배,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추진

2026년부터 5년간… 도내 지방도 56개 노선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생활권 확대 및 새만금 유치 기업 증가 등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전북자치도는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도로관리청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직전 계획인 제3차 도로건설·관리(2021~2025) 계획은 2020년 12월에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지방도 56개 노선(1,640㎞) 및 인접시도 도로망을 고려한 도로건설·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도로계획 및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을 반영한다.

도내 교통현황 및 수요량 예측, 14개 시군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인근 시도 협의 등을 통해 △도내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도로망의 효율적인 정비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 후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제시된 향후 5개년간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 도로사업과 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시행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새만금 유치 기업 확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축산물 운반·보관업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하절기에 대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동물방역과 및 도내 시·군은 이번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축산물의 운반·보관 시 적정온도 준수 △냉장·냉동시설기준 준수 △무허가·미표시·미포장 등 불법 축산물 운반 및 보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유통·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냉장·냉동시설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 /이만호 기자